

중 국

[중국 조사보고서] 중국 내 어문저작물 유통현황 및 보호방안

2026. 8.
국제협력팀
중국사무소

I. 서론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출판시장 가운데 하나로, 도서·신문·정기간행물 등 전통 출판산업의 탄탄한 기반 위에 전자책·온라인 독서 플랫폼·오디오북·웹소설 등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고속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에서 한국의 도서, 웹소설 등 어문저작물은 중국어 번역 출판, 전자책, 온라인 독서 플랫폼, 오디오 콘텐츠 및 2차적 이용 등의 형태로 중국시장에서 이용될 수 있다.

특히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보편화와 디지털 콘텐츠 유통 생태계의 재편에 따라 어문저작물의 이용 방식은 기존 종이책 기반의 복제·발행에서 온라인 전송·디지털 구독·2차 창작·AI 학습데이터 활용 등으로 다원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문저작물의 저작권을 권리의 발생, 귀속단계부터 계약, 유통, 플랫폼 이용 및 침해 대응단계까지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저작물 이용 방식의 다원화는 새로운 형태의 저작권 침해 위험도 함께 증가시키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폭발적 성장과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자책 불법 복제·온라인 무단 전송, 플랫폼을 통한 저작권 침해, 무단 번역·2차 저작물의 무단 작성, AI 학습데이터로서의 어문저작물 무단 이용, 기술적 보호조치 무단 회피 등 기존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저작권 침해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 도서·웹소설·웹툰 등 콘텐츠의 중국 수출과 라이선스 거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다수의 한국 저작권자와 출판기업은 중국 저작권 법제와 침해 대응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효과적인 권리 구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보고서는 어문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핵심 초점으로 하여, 중국 내 어문저작물의 유통 방식과 수입 심사 제도를 기본 배경으로 검토한 뒤, 어문저작물에 적용되는 중국 저작권 보호 법제와 주요 침해 유형별 구성 요건·사법 판단 기준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 저작권자·출판기업 및 관련 사업자가 중국 시장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중국 시장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실효적이고 전문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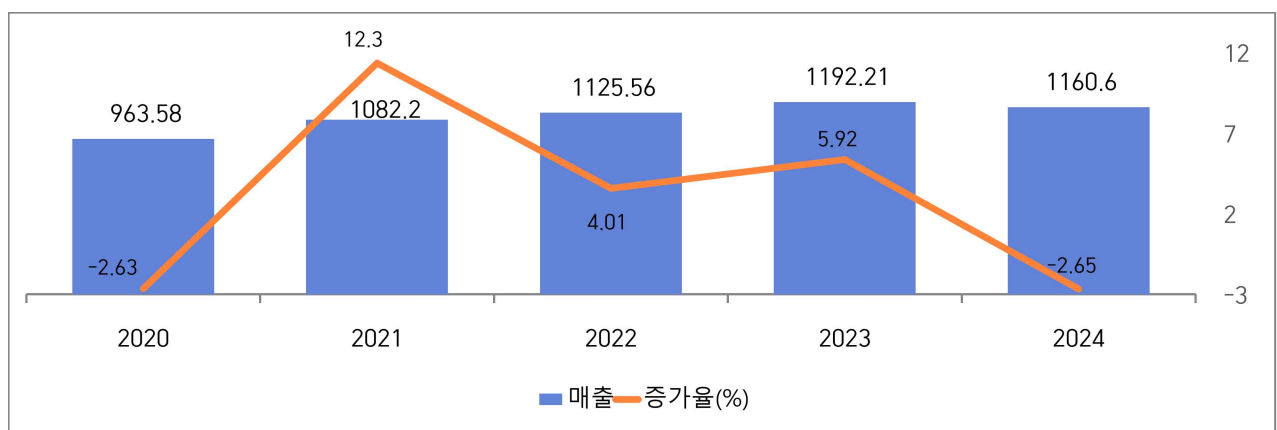
II. 중국 출판 저작물 유통 현황

1. 시장현황

중국 도서출판산업은 2020~2023년간 계속 성장세를 보였다. 2020년 매출 963.58억 위안은 전년 대비 2.63% 감소했으나, 2021년 12.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2023년에는 최근 5년간 최고 매출을 기록하였다. 2024년에는 전년 대비 2.65% 감소하여 매출이 1160.6억 위안으로 축소되었다.

(그림 1) 중국 도서출판 매출 현황(2020~2024)

(단위: 억 위안)



출처: 국가신문출판서(国家新闻出版署) / 국연컨설팅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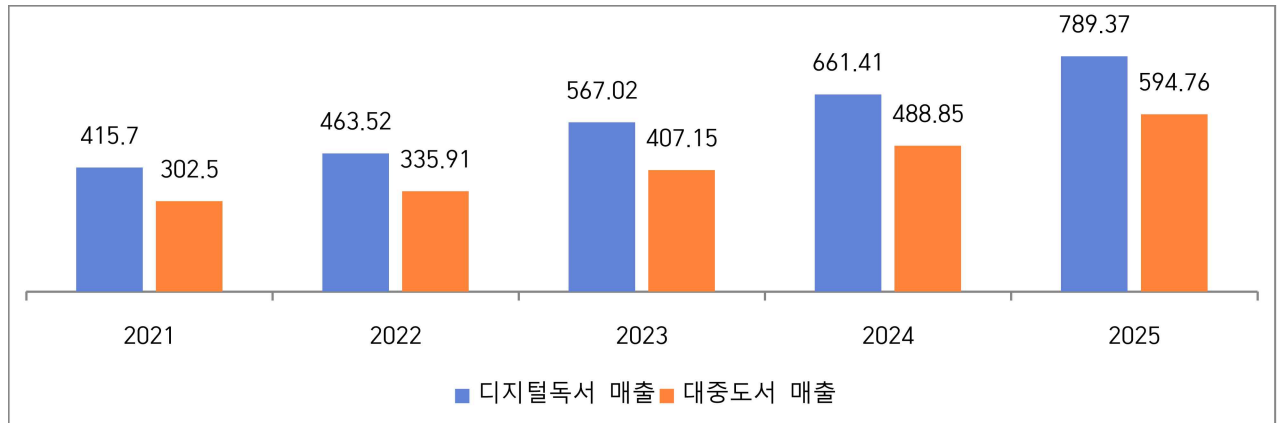
중국음상디지털출판협회의 《2025년도 중국 디지털독서보고》에 따르면 중국 디지털독서 시장은 2021~2025년까지 5년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 디지털독서¹⁾ 총 매출 규모는 2021년 415.7억 위안에서 2025년 789.37억 위안으로 확대되었으며, 5년간 약 89.9%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중 시장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대중 독서 시장 역시 동기간 꾸준한 성장을 보였다. 대중 독서 매출은 2021년 302.5억 위안에서 2025년 594.76억 위안으로 늘어나, 5년간 약 96.6%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며 전체 시장 성장을 견인하였다.

1) 디지털독서는 대중독서, 오디오독서, 전문독서로 구분된다. 그 중 대중독서는 사용자가 지식을 습득하고 심신을 즐겁게 하며 자기 문화 소양을 제고하기 위해 진행되는 디지털 독서 행위를 말하며, 주로 네트워크 문학 플랫폼과 관련된 작품 독서와 전자책 독서를 포함한다. 오디오독서는 사용자가 네트워크를 통해 다운로드하거나 온라인으로 지식성·사상성·과학성을 갖춘 디지털 오디오 콘텐츠를 청취하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청취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오디오북, 방송 프로그램과 지식 유료 강의 등을 포함한다. 전문독서는 사용자가 과학 연구·교육 교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디지털 콘텐츠를 조회·다운로드하고 독서하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전문 출판 및 서비스 기관의 학술지 문헌, 데이터베이스, 디지털 교재, 온라인 강의와 멀티미디어 자원 등 지식 서비스 제품 독서를 포함한다.

(그림2) 중국 디지털도서 / 대중도서 매출 현황(2021~2025)

(단위: 억 위안)



출처: 2025년도 중국 디지털도서보고 / 국연컨설팅 정리

2. 해외 출판물 중국 내 유통

1) 해외 출판물 중국 내 유통방식

해외 출판물을 중국 시장에서 유통하는 방식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며, 시장 규모·적용 분야·성장세에서 뚜렷한 위상 차이를 보인다.

(1) 종이책 원서 수입

해외에서 인쇄된 외국어 원서를 직접 수입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시장 비중이 가장 낮은 소규모 전문 유통 방식이다. 주로 고등교육·과학연구 기관의 학술 장서 구매, 중국 거주 외국인의 모국어 도서 수요, 전문 어학 학습자, 공공 도서관 소장 등 특정 수요에 한정되며 일반 대중 독자 대상 유통은 극히 적다.

(2) 저작권 도입 후, 번역본을 종이책으로 출판

중국 내 해외 출판물 유통의 가장 핵심적이고 주류적인 방식으로 시장 규모와 적용 품목 범위가 가장 넓다. 대중 문학·아동·사회과학·전문 서적까지 전 품목을 커버하며 오프라인 서점, 전자상거래, 도서관 구매 등 전 채널에서 유통된다.

(3) 중국 내에서 출판한 해외 종이책 내용을 전자책으로 전환하여 온라인 유통

해외 저작권을 도입하여 중국 내 출판사가 종이책(번역본 포함)으로 이미 출판을 완료한 작품을 EPUB 형식으로 제작하여 온라인 도서 플랫폼에 전자책으로 유통하는 방식이다. 현재 중국 도서 플랫폼에 판매되고 있는 해외 전자책(번역본 포함)의 절대다수가 본 방식에 해당하며, 법적 리스크가 가장 낮고 절차가 간소한 안정적인 유통 모델이다.

(4) 저작권 도입 후 원문 또는 번역본을 전자책으로 온라인 유통

모바일 독서와 웹소설 플랫폼의 발전에 힘입어 최근 가장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신흥 유통

방식이다. 주로 대중 오락·웹소설류 콘텐츠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르다.

(표1) 해외 출판물 중국 내 유통방식 비교

구분	종이책 원서 수입	저작권 도입 후 번역본을 종이책으로 출판	중국 내에서 출판한 해외 종이책 내용을 전자책으로 전환하여 온라인 유통	저작권 도입 후 원문 또는 번역본을 전자책으로 온라인 유통
수입주체	《출판물 수입 경영허가증》 보유 수입업체	《도서출판허가증》 보유 출판사	《네트워크 출판 서비스 허가증》 보유 플랫폼	《네트워크 출판 서비스 허가증》 보유 플랫폼
ISBN 필요여부	X	√	중국 내에서 출판한 종이책 ISBN 표기	X
통계분류	회물무역원서 수입 통계	지식재산권 무역 저작권 도입 간수에 집계	X	X
시장 위상	전문 소수 수요 위주, 소규모 방식	가장 핵심·주류 방식	디지털 독서 보급에 따라 꾸준히 성장	모바일 웹소설 플랫폼 발전으로 최근 급성장하는 신형방식
주요 대상	학술연구·도서관·거주외국인·어학학습자	전 장르 대중전문 도서	종이책의 디지털 확장판	해외 웹소설 대중 오락 콘텐츠 위주
주요 유통 채널	오프라인 서점 온라인 서점	오프라인 서점 온라인 서점	디지털 독서 플랫폼	웹·모바일 독서 플랫폼

2) 해외 출판물 유통방식에 따른 중국 내 수입·심사 절차

해외 출판물 유통방식에 따른 수입·심사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종이책 원서 수입

종이책 원서는 《출판물 수입 경영허가증》을 보유한 전문 업체만 수입이 가능하다. 《출판물 수입 경영허가증》은 국무원출판행정주관부서에서 통일적으로 심사·발급하며, 전국적으로 자격증을 보유한 기업 수는 많지 않다. 중앙급 문화 국유기업이 핵심 주력이고, 각 성(省)에는 소수의 지방 자격 보유 기업이 있다.

종이책 원서의 수입은 자체 내용 심사, 성급 이상 출판행정부서의 비치등록과 해관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비치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① 도서명, ② 출판사, ③ 수출국, ④ 작가, ⑤ ISBN, ⑥ 어종, ⑦ 수량, ⑧ 장르, ⑨ 수입통관지역, ⑩ 주문자, ⑪ 기타 등이다. 출판행정부서는 비치등록 서류 접수 후 근무일 20일 내에 비치등록을 마치고 비치등록 완료서류를 발부하며, 해관은 비치등록 완료서류를 근거로 통관절차를 밟는다.

(2) 저작권 도입 후, 번역본을 종이책으로 출판

중국 내 출판사가 해외 저작권자로부터 중국 대륙 지역의 간체자 종이책 출판권을 도입한 뒤, 번역과 자체 내용심사를 진행하고, 저작권계약 등록, 필요시 중대 주제(국가안전, 사회안정) 허가 절차를 거쳐 중국 내 ISBN과 CIP 데이터를 취득한다.

출판사는 저작권 계약 체결 후 7일 내에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출판행정부서에 ① 출판외국

도서계약등기표, ② 출판외국도서 계약서 원문, 중문 번역본, ③ 신청서를 제출하고 저작권 계약 등록을 이행한다. 출판행정부서는 서류 접수 후 근무일 7일 내에 등록을 마치고 계약등록번호를 발부한다.

(3) 중국 내에서 출판한 해외 종이책 내용을 전자책으로 전환하여 온라인 유통

네트워크 출판물로 분류되며, 《네트워크 출판 서비스 허가증》을 보유한 플랫폼이 유통 주체가 된다. 종이책 출판 단계에서 심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전자책 전환 단계에서는 저작권자로부터 정보네트워크전파권 허가를 취득하고, 플랫폼 내부 내용심사를 이행하는 것 외에 별도의 건별 출판 주제 심사나 저작권계약 등록 의무가 없다. 전자책 상세페이지에는 종이책의 ISBN을 재사용하여 표기한다.

(4) 저작권 도입 후 원문 또는 번역본을 전자책으로 온라인 유통

《네트워크 출판 서비스 허가증》을 보유한 플랫폼이 주체가 되어 해외 저작권자로부터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을 취득한 뒤, 플랫폼 자체의 편집 심사 체계로 내용을 검토해 서비스한다. 일반 주제의 작품은 건별 행정 심사가 면제되며, 중대 주제(국가안전, 사회안정)에 해당할 경우에만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친다.

3. 중국 내 해외 도서 수입 및 저작권 도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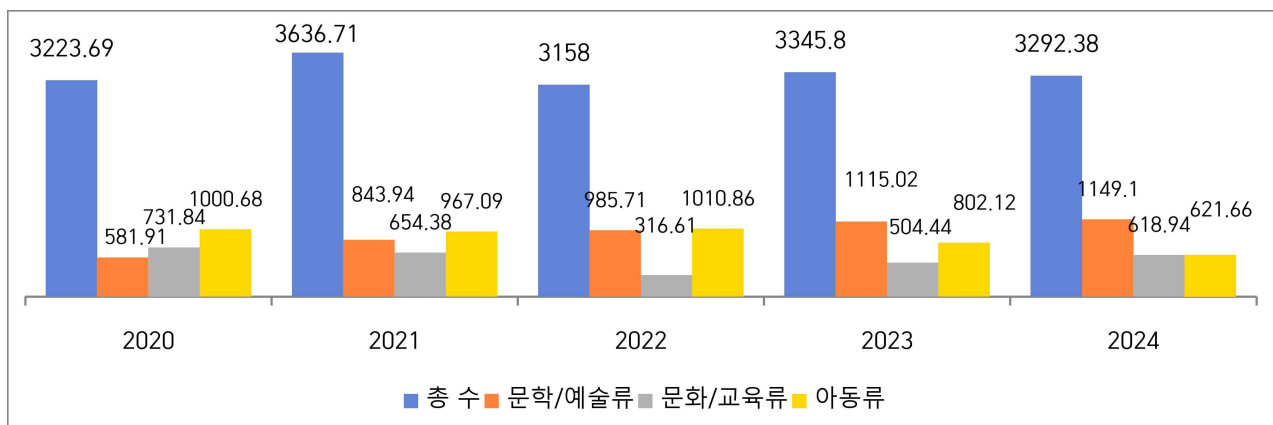
1) 해외 도서 수입 추이

중국 해외 도서 수입 규모는 2021년 3636.71만권을 정점으로 2022년 소폭 하락한 뒤, 2023년 회복세를 보였으나, 2024년에는 소폭 둔화되어 3292.38만권을 기록하였다.

장르별로 문학·예술류 도서는 2022년 이후 지속 상승해 2024년 1149.1만권으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다. 문화·교육류 도서는 2022년 급감 후 점진 회복 중이며, 아동류 도서는 2024년 621.66만권으로 큰 폭 감소하며 수입 구조의 변화를 보였다.

(그림3) 해외 도서 수입 주요 장르별 현황(2000~2024)

(단위: 만권/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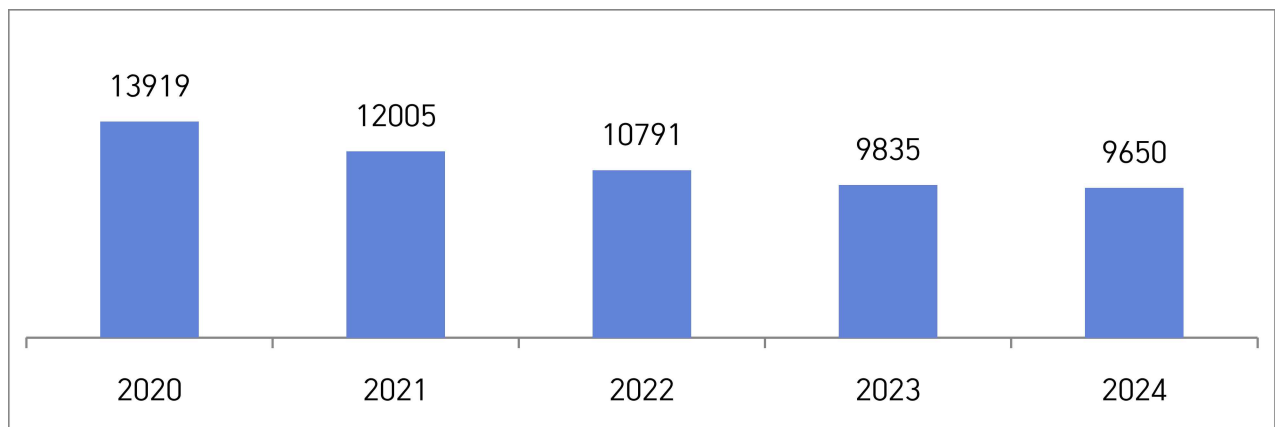
출처: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 국연컨설팅 정리

2) 해외 도서 저작권 도입 현황

중국 해외 도서 저작권 도입 품목 수는 2020~2024년까지 5년 연속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해외 도서 저작권 도입 품목 수는 2020년 13,919종에서 2024년 9,650종으로 축소되었으며, 5년간 약 30.7%의 감소율을 기록하였다.

(그림4) 해외 도서 저작권 도입 현황(2000~2024)

(단위: 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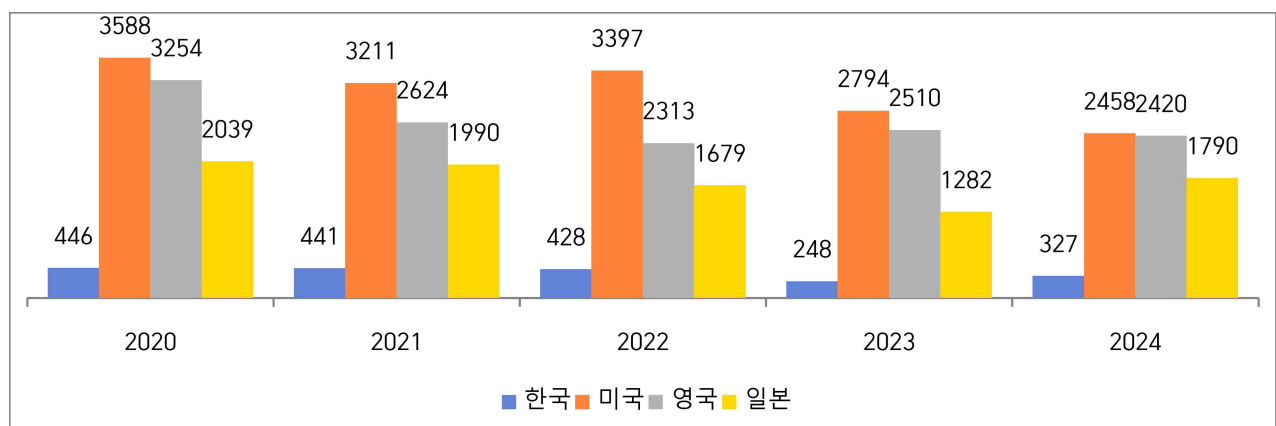
출처: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 국연컨설팅 정리

3) 한국 도서 저작권 도입 현황

중국에 도입된 한국 도서 저작권 품목 수는 2020~2024년까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23년을 저점으로 2024년 소폭 반등하는 흐름을 나타냈다. 한국 도서 저작권 도입 건수는 2020년 446종에서 2023년 248종까지 축소되었으며, 2024년에는 327종으로 일부 회복하였다.

(그림5) 해외 도서 저작권 도입 주요 국가별 현황(2000~2024)

(단위: 종)



출처: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 국연컨설팅 정리

4. 어문저작물 저작권 등록절차

중국에서 외국인이 저작권자인 어문저작물의 저작권 등록은 중국판권보호센터(中国版权保护中心)에서 처리된다. 저작권은 창작 완료 시점부터 자동 발생하므로 등록이 의무는 아니나, 저작권 등록증은 저작권 귀속을 추정하는 공적 증거로서 침해 분쟁 시 권리 증명 부담을 경감시킨다.

1) 제출서류

어문저작물 저작권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① 작품 저작권 등록신청서, ② 권리자 신분증명서, ③ 권리귀속증명문건, ④ 작품 샘플, ⑤ 작품등기 승낙서, ⑥ 저작권등기 실물 샘플 전시수권서(작품 샘플 실물 제공의 경우), ⑦ 대리수권서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대리신청의 경우)이다.

2) 처리절차

서류 제출 후 형식심사를 통해 수리여부를 결정하고, 수리 시 등록증은 수리일로부터 근무일 25일 이내에 발급한다.

Ⅲ. 중국 내 어문저작물 침해 현황

1. 중국의 어문저작물 관련 법률체계 및 정책

1) 중국 어문저작물 관련 주요 법률체계

중국의 어문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보호와 별도로, 해당 저작물이 도서, 전자출판물, 네트워크 출판물 등으로 출판, 유통되는 경우 출판행정 및 온라인 서비스 관련 규제를 받는다. 따라서 어문저작물의 법적보호와 출판물의 행정관리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유형별 핵심 법규

(표2) 어문저작물 관련 중국 법률체계

구분	주요 법규	주요 기능
법률	저작권법, 민법전, 형법	저작권 발생·권리 내용·보호기간, 침해 구제(민사·형사)
행정법규	출판관리조례, 저작권법실시조례, 정보네트워크전파권보호조례	출판 기본 제도, 권리 내용 구체화, 네트워크 환경 보호
부문규정	도서출판관리규정, 전자출판물출판관리규정, 네트워크출판서비스관리규정, 출판물시장관리규정	종이책·전자출판물·네트워크출판물·유통 단계별 허가 및 관리
규범문서	도서품질보장체계, 도서·간행물·음상제품·전자출판물 중대주제비준방법, 외국도서 출판 계약등기에 관한 국가판권국의 통지(국권[1995]1호) 해외 전자출판물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출판·복제의 저작권 수권계약 등기·인증 관련 통지(국권[1996]28호)	삼심삼교(三審三校), 중대주제 허가, 해외 도서 계약 등록
국제조약	베른협약, WCT, TRIPS	외국 저작물 자동 보호, 디지털 환경 보호 기준

(2) 기능별 핵심 내용

① 저작권 보호: 《저작권법》은 어문저작물을 명시적 보호 대상으로 하며, 복제권·발행권·번역권·정보네트워크전파권 등 13가지 재산권과 4가지 인격권을 부여한다. 저작권은 창작 완료 시 자동 발생하며 보호기간은 저작자 생애 및 사망 후 50년이다.

② 출판 행정관리: 《출판관리조례》는 모든 출판물의 기본 틀을 규정하며, 종이책은 《도서출판관리규정》, 물리매체 전자출판물은 《전자출판물 출판관리규정》, 온라인 전자책은 《네트워크출판 서비스 관리규정》이 각각 적용된다.

③ 내용심사·품질관리: 《도서품질보장체계》에 따른 삼심삼교(초심·복심·종심+3회 교열)는 모든 정식 출판물의 의무 절차이다. 정치·외교·민족·종교 등 중대 주제는 《도서·간행물·음상제품·전자출판물 중대 주제 비준 방법》에 따라 국가신문출판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해외 도서 계약 등록: 종이책 번역 출판 시 국권[1995]1호에 따라 저작권 계약을 성급 이상 출판행정부서에 강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증서는 권리 증명 및 침해 분쟁의 핵심 증거가

된다. 물리매체 전자출판물은 국권[1996]28호에 따라 국가판권국의 인증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순수 네트워크 전자책은 두 등록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3) 해외 도서 도입 시 적용 법규

(표3) 해외 도서 도입 시 적용 법규

출판 형태	핵심 적용 법규
종이책 번역 출판	저작권법 + 국권[1995]1호 + 도서출판관리규정
물리매체 전자출판물	저작권법 + 국권[1996]28호 + 전자출판물출판관리규정
네트워크 전자책	저작권법 + 정보네트워크전파권보호조례 + 네트워크출판서비스관리규정

2) 최근 중국 정부의 저작권 보호정책과 집행 동향

최근 중국 정부는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국가판권국·공업정보화부·공안부·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의 4개 부처는 매년 「검망(剑网) 특별단속」을 공동 실시하여 네트워크 저작권 침해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2026년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제22회 「검망2026」은 영화드라마, 문화창작, 도서, 인공지능(AI)의 4대 분야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삼았으며, 전자책·온라인 소설·PDF 공유·오디오북 등 출판 콘텐츠 분야의 불법 유통과 함께 AI 분야의 저작권 침해를 처음으로 독립된 중점 분야로 포함하였다.

한편, 생성형 AI가 학습데이터로 어문저작물을 무단 이용하는 문제가 새로운 정책·사법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국가판권국은 「검망2026」을 통하여 AI 학습데이터의 무단 수집·이용, AI 생성 콘텐츠의 불법 유통 등을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최고인민법원은 2026년 4월 발표한 《인민법원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실시방안(2026-2030년)》에서 자연인의 입력 지시 내용·선정 및 수정 과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AI 생성 내용의 법적 속성을 정확히 인정하도록 규정하는 등, AI 기술 발전과 저작권 보호 간의 균형을 모색하는 사법 규범화를 진행하고 있다.

2. 어문저작물 침해 유형 및 판단기준

중국은 베른조약 및 TRIPS 협정 등 국제조약에 가입하여 외국 저작물에 대해서도 자국 저작물과 동등한 보호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므로, 한국에서 출판된 어문저작물도 중국 내에서 저작권 침해 시 현지 법령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 중국에서 어문저작물은 독창성과 복제 가능성 요건을 충족하는 문학·예술·과학 분야의 서적을 포함하며, 본문·목차·표지 디자인·삽화·지도·연표 등 도서에 포함된 모든 창작적 요소가 개별적으로 보호 대상이 된다. 다만 개인 학습·연구, 학교 수업 목적의 소량 복제, 도서관 보존, 뉴스 보도 목적의 적절한 인용 등 《저작권법》이 정한 법정 합법 사용 사유는 침해로 보지 않는다. 이하에서는 어문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유형 및 판단기준에 대해 정리한다.

1) 복제권 침해

(1) 침해 유형

가장 기본적이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침해 유형으로, 저작권자 허가 없이 도서 전체 또는 핵심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종이책 환경에서는 불법 인쇄 공장에서 정식 출판 도서를 복제하여 해적판 종이책을 제작하는 경우, 도서 전체 또는 핵심 부분을 복사·스캔하여 학원·교육기관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출판사가 계약에서 허가된 부수를 초과하여 인쇄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전자책 환경에서는 종이책을 무단으로 스캔하여 PDF·EPUB·MOBI 등 전자책 파일로 제작하는 경우, 전자책에 적용된 DRM을 해제하거나 파괴한 후 전자책 파일을 복제하거나 형식을 변환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판단기준

판단기준은 저작권자 허가 없는 복제 행위 여부를 우선 확인하며, 전체 복제가 아니더라도 독창성이 인정되는 핵심 챕터나 표현 부분을 복제한 경우 침해가 성립된다. 복제 방식을 불문하며 인쇄·복사·스캔·필사·디지털 파일화 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고정된 매체에 1부 이상을 제작하면 복제에 해당하고, 영리 목적 여부도 침해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침해

(1) 침해 유형

온라인 환경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침해 유형으로, 대표적인 사례로는 포럼·클라우드 저장소·리소스 사이트·텔레그램 채널 등에서 불법 PDF·EPUB·MOBI 전자책 파일을 공유하는 경우, 웹소설 플랫폼이나 팬카페에서 해외 도서를 무단으로 번역하여 연재하는 경우, 불법 오디오북 앱이나 팟캐스트에서 도서 내용을 무단으로 낭독하여 제공하는 경우, 전자책 전문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여 다운로드 또는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SNS나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서 불법 전자책 파일 또는 그 다운로드 링크를 대량으로 배포하는 경우 등이 있다.

(2) 판단기준

판단기준은 저작권자 허가 없는 네트워크상 제공 여부이며, 이용자의 자유로운 접근·다운로드가 가능한 상태를 조성하면 침해가 성립된다. 무료 제공이나 트래픽 유도 목적 여부는 침해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실제로 다운로드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접근 가능한 상태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침해가 성립된다.

3) 번역권 침해

(1) 침해 유형

번역권 침해는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도서를 한 언어 문자에서 다른 언어 문자로 변환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정식 번역 출판 계약 없이 해외 베스트셀러를 무단으로 번역하여 종이책이나 전자책으로 출판하는 경우, 개인이나 스터디 카페에서 자체적으로 번역한 PDF 파일을 배포하는 경우, 웹소설 플랫폼이나 팬카페에서 해외 웹소설을 무단으로 번역하여 연재하는 경우 등이 있다.

(2) 판단기준

판단기준은 저작권자의 허가 없는 언어 변환 행위 여부이며, 출판·유통 여부나 영리 목적 여부는 침해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번역본을 개인적으로만 소장하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경우에도 번역 행위 자체는 침해에 해당하나 실제로 처벌이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전체 번역이 아닌 부분 번역의 경우에도, 원작의 독창적 표현을 실질적으로 차용한 경우 침해가 성립되며, 단순한 사상이나 아이디어·줄거리만을 전달하는 경우는 침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4) 배포권 침해

(1) 침해 유형

배포권 침해는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도서의 원본 또는 복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 방식으로 공중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불법 인쇄 공장에서 제작된 해적판 종이책을 오프라인 서점이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경우, 도서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학원의 교재로 제작한 뒤 수강생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등이 있다.

(2) 판단기준

판단기준은 저작권자 허가 없는 유형 매체에 고정된 도서 원본 또는 복제품의 판매·증여 행위 여부이며, 영리 목적의 판매뿐 아니라 비영리 목적의 무상 증여도 배포권 침해에 해당한다. 배포권 침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복제품이 이전되어야 하며, 단순히 복제품을 제작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는 복제권 침해에 해당할 뿐 배포권 침해까지는 성립되지 않는다.

5) 개작권 및 관련 2차적 저작물 권리 침해

(1) 침해 유형

개작권 침해는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도서 내용을 변경하여 독창적인 신작을 창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중국 저작권법은 개작권 외에도 촬영권, 편집권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과 관련된 권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연권 등 기존 작품의 이용 권리와 구별하여 각 행위의 성격에 따라 해당 권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소설을 무단으로 웹툰·게임 시나리오·희곡 등으로 각색하는 경우는 개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소설을 무단으로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는 경우는 개작권과 촬영권 동시 침해에 해당한다. 도서 내용을 무단으로 요약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저작물로 제작하는 경우는 개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여러 도서의 일부를 무단으로 모아 선집으로 제작하는 경우는 편집권 침해에 해당한다. 아동 도서의 내용을 무단으로 뮤지컬이나 연극으로 각색하여 공연하는 경우에는 개작권과 공연권 침해가 경합하며, 별도의 각색 없이 직접 공연(예로 낭독)하는 경우에는 공연권 침해에 해당한다.

(2) 판단기준

판단기준은 원저작물의 독창적 표현을 실질적으로 차용하면서, 새로운 창작적 부가가치를 가미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였는지 여부이다. 단순한 사상·아이디어·사실 정보의 차용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으나, 원작의 구체적 표현·캐릭터 설정·플롯 구조·고유한 문체 등을 실질적으로 이

용한 경우 침해가 성립된다. 원작의 표현을 얼마나 변경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원작의 독창적 부분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침해가 인정되며, 2차적 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적 기여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저작자의 허가 없이는 침해가 성립된다.

6) 저작인격권 침해(공표권·서명권·수정권·작품 완전성 보호권)

(1) 침해 유형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작품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 중국 저작권법은 공표권·서명권·수정권·작품 완전성 보호권의 4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공표권은 저작자가 작품을 공중에게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권리로, 저작자의 동의 없이 미발표 원고·서신·미완성 작품 등을 무단으로 출판하거나 인터넷에 공개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침해 유형이다. 서명권 침해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타인의 도서를 표절하여 자기 이름으로 출판하는 경우, 번역본에서 원저자의 이름을 삭제하거나 허위로 표기하는 경우 등이 있다. 수정권은 저작자가 스스로 작품을 수정하거나 타인에게 수정을 허가하는 권리이고, 저작자의 동의 없이 도서의 문장이나 구성을 임의로 수정하는 경우가 수정권 침해에 해당한다. 작품 완전성 보호권은 작품이 왜곡·변조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권리이다. 대표적인 침해 사례로는 저작자의 동의 없이 도서 내용을 임의로 삭제·추가·변경하여 왜곡·변조하는 경우, 번역 과정에서 원작의 내용이나 사상을 왜곡하는 경우 등이 있다.

(2) 판단기준

서명권 침해는 저작자의 동의없이 저작자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성립하며, 영리 목적 여부와 무관하고 저작자가 실제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도 침해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수정권 침해는 저작자의 동의 없이 작품의 문장·구성·내용에 대해 수정·삭제·증보를 가하는 경우 성립되며, 영리 목적 여부나 수정 정도의 경중과 무관하게 동의 없는 수정 행위 자체로 침해가 인정된다. 작품 완전성 보호권 침해는 저작자의 동의 없이 작품의 내용·형식을 변경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작품의 완전성을 해친 경우 성립된다. 다만, 출판사가 편집 과정에서 문장을 다듬거나 오타자를 수정하는 통상적인 편집 행위는 수정권과 작품 완전성 보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7)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1) 침해 유형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는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한 암호화, 단말기 지정, 사용 기간 제한, 워터마크 등 유효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의도적으로 회피·파괴하는 행위, 또는 회피·파괴를 목적으로 크랙 툴을 제작·수입·배포하거나 타인이 회피·파괴하도록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전자책 플랫폼에 적용된 DRM(디지털 저작권 관리)을 해제하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유료 전자책 플랫폼의 인증 시스템을 우회하여 결제 없이 콘텐츠에 접근하는 경우, 전자책에 삽입된 워터마크를 제거하거나 변조하여 불법 배포의 추적을 회피하는 경우, 전자책의 단말기 지정 제한을 해제하여 여

러 기기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DRM 해제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는 경우 등이 있다. 크랙 툴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타인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를 대행하는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도 모두 침해에 포함된다.

(2) 판단기준

판단기준은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의도적으로 유효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파괴하거나 이를 위한 도구·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가 있으면 성립한다. 침해 성립은 행위의 영리 여부나 사용 범위와 무관하며,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한 결과물을 실제로 유통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우회 행위 자체만으로도 침해가 성립된다.

3. 중국 내 어문저작물 침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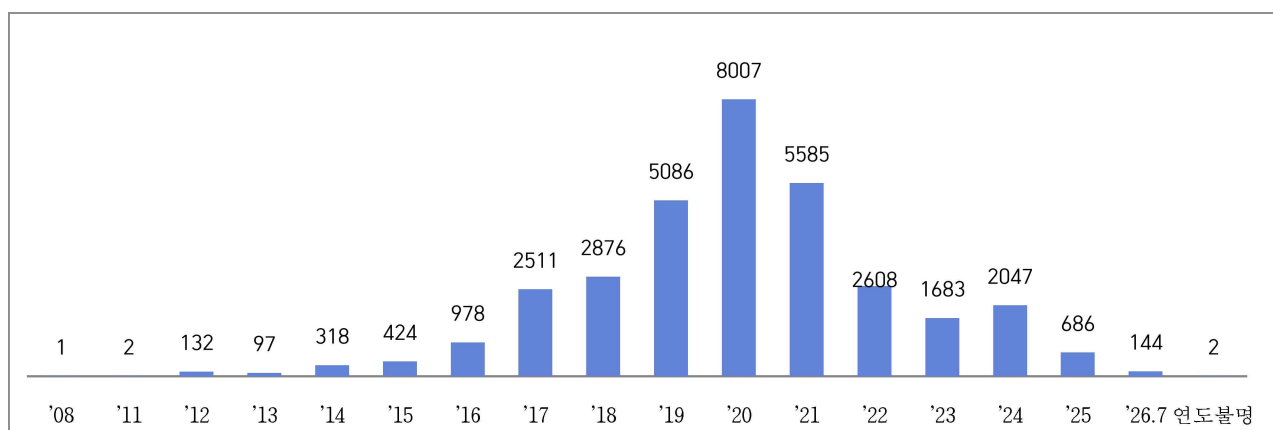
중국재판문서망(中国裁判文书网)에 공개된 2008년부터 2026년 7월까지의 지식재산권 판결 통계에 따르면, 전체 지식재산권 사건은 221만 8,647건이며, 이 중 저작권 침해 민사 1심 판결은 44만 4,361건(20.03%)이다. 어문저작물 관련 사건은 3만 3,187건으로 전체 저작권 침해 사건의 7.47%를 차지한다.

1) 어문저작물 침해에 대한 연도별 추이

어문저작물 저작권 침해 판결 건수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연간 1~2건으로 매우 저조했으나, 2012년을 기점으로 급증하기 시작했다. 2017년에는 2천 건을 돌파했으며, 2020년에는 8007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2021년부터는 급감 추세로 돌아서 2025년에는 686건까지 크게 줄었다.

(그림6) 중국 어문저작물 침해에 대한 연도별 추이 (2008~2026.7)

(단위: 건)



출처: 중국재판문서망 / 국연컨설팅 정리

2) 어문저작물 침해에 대한 지역별 현황

2008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중국 내 32개 지역에서 발생한 어문저작물 침해 사건의 판결 수치를 살펴보면, 1천 건을 초과한 지역은 광둥성, 베이징시, 상하이시, 저장성, 쓰촨성, 후난성, 장수성 총 7개이고, 그 중 광둥성이 12,118건으로 전체의 36.5%를 차지하며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표4) 중국 어문저작물 침해에 대한 지역별 사건 수

(단위: 건)

지역	사건 수	지역	사건 수
광둥성	12118	싼시성	128
베이징시	5522	허베이성	126
상하이시	3069	충칭시	117
저장성	2782	광시좡족자치구	74
쓰촨성	2252	장시성	55
후난성	1222	윈난성	54
장수성	1186	닝샤후이주자치구	52
하이난성	975	꾸이저우성	40
푸젠성	974	지린성	37
산둥성	617	신장웨이우자치구	35
톈진시	562	산시성	26
랴오닝성	282	네이멍구자치구	15
후베이성	258	간쑤성	15
허난성	221	헤이룽장성	12
지역불명	174	칭하이성	8
안후이성	173	시좡자치구	6

출처: 중국재판문서망 / 국연컨설팅 정리

IV. 중국 내 어문저작물 보호방안

1. 어문저작물 침해 입증 및 증거 수집 시 주의사항

중국 내 어문저작물 침해 소송에서 증거는 권리 귀속, 침해 사실, 손해액을 입증하는 핵심 요소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수집·관리해야 한다.

1) 저작권 권리 증명 및 원본 자료 보관

중국 내에서 권리 증명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판권보호센터에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작권 등록증은 권리 귀속을 입증하는 강력한 1차 증거로 활용되며, 저작권은 창작

완료 시 자동 발생하므로 등록이 필수는 아니나 실무에서 소송 제기 시 가장 효과적인 권리 증명 수단이다.

저작물 원고 원본·최초 출판본·저작권 양도·라이선스 계약서·출판 계약서·표지 및 본문 디자인 원안·삽화 원본·최초 발표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하여, 등록증과 함께 권리의 실질적 귀속과 창작 시점을 보충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2) 증거 수집의 적법성 확보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되어야 하며, 해킹, 무단 침입, 위법한 녹음·녹화 등 위법한 방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법원에서 배제된다.

침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해적판 종이책 구매, 불법 전자책 다운로드, 침해 웹사이트 접속, SNS·카페 게시물 확인 등은 반드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거나 타임스탬프 서비스를 통해 취득 시점과 내용을 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온라인 침해는 게시물이 삭제될 위험이 높으므로 신속한 증거 고정이 필수적이다.

3) 증거의 구체성과 완전성 확보

침해 행위의 존재, 침해자의 신원, 침해로 인한 구체적 손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해야 한다.

주요 증거 목록: ① 침해 복제품 실물(해적판 종이책, 불법 전자책 파일), ② 구매·다운로드 영수증 및 결제 기록, ③ 침해 웹사이트·판매 페이지·SNS 게시물 캡처 및 공증문서, ④ 원본과 침해물 간의 내용 중복도·표절 비교 분석 보고서, ⑤ 침해자의 판매량·다운로드 수·클릭 수·회원 수 기록, ⑥ 손해액 산정 근거(정상 라이선스 가격, 도서 정가, 매출 감소액, 침해자의 불법 소득 추정 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4) 증거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

수집된 전자파일, 서류, 공증문서는 변조 및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전자 증거는 반드시 다중 백업을 유지하고, 침해 복제품 실물은 훼손되지 않도록 밀봉 보관하며, 관련 하드웨어(침해 서버 이미지, 다운로드 기기 등)는 증거의 진정성을 재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5) 전문적 검증 활용

표절·내용 중복, 개작 작품의 실질적 유사성, 번역본의 원작 의존성 등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된 지식재산 감정기관 또는 출판·문학 전문가의 감정보고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특히 표절 분쟁에서는 객관적인 중복도 수치와 구체적인 표절 부분 지적이 침해 인정의 핵심이 된다.

2. 어문저작물 침해 유형별 실무 해결방안

어문저작물의 침해 유형은 권리의 성격에 따라 대응 방식과 실무상 주의점이 다르므로, 각 유형별 특징에 맞는 구제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1) 복제권 침해 (해적판 인쇄·무단 복사·스캔 / 불법 전자책 파일 제작 등)

(1) 실무 해결방안

- 침해 규모가 작거나 개인·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협상 또는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 불법 인쇄 공장, 대규모 해적판 유통 조직, 광범위한 전자책 불법 배포의 경우 지방 저작권 관리기관에 행정 신고하여 신속하게 침해를 제압하고, 침해물을 압수·폐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위법 소득이나 불법 영업액이 형사 입건 기준에 도달하는 경우 공안기관에 형사 고발하여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2) 실무상 주의점

- 개인 학습·연구 목적의 소량 복제, 도서관의 보존 목적 복제 등은 침해로 보지 않으므로, 침해 해당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 복제권 침해는 대부분 발행권·정보네트워크전파권 침해와 경합하므로, 증거 수집 시 복제 행위와 유통·전파 행위를 모두 포괄하여 고정해야 한다.
- 불법 인쇄 공장의 경우 현장 단속이 가장 효과적이므로, 행정 신고 시 공장 소재지, 생산 규모, 유통 경로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단속 성공률을 높여야 한다.

2)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침해 (불법 전자책 사이트·웹하드·클라우드 공유 / SNS·카페·앱을 통한 무단 제공 등)

(1) 실무 해결방안

- 침해 게시물·링크를 호스팅하는 플랫폼에 저작권 침해 통지를 발송하여 신속하게 게시물을 삭제하고 링크를 차단한다.
- 침해 규모가 크거나 플랫폼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행정 신고 또는 민사 소송을 진행한다.
- 다운로드 수·클릭 수·회원 수가 형사 입건 기준에 도달하는 경우 형사 고발을 검토한다.

(2) 실무상 주의점

-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은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작품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단순 링크 제공 행위는 직접 침해가 아닐 수 있으나, 불법 파일임을 알면서 대량으로 링크를 제공·관리하거나 광고 수익을 얻는 경우 공동 침해(방조 침해)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 온라인 침해는 게시물 삭제 위험이 높으므로, 통지 발송 전에 반드시 공증·타임스탬프로 증거를 고정해야 한다.

3) 번역권 침해 (무단 번역 출판 / 개인·스터디카페 번역본 배포 / 웹소설 팬 번역 연재 등)

(1) 실무 해결방안

- 무단 번역본을 출판·판매하거나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경우 번역자와 출판자·판매자를 공동 피고로 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
- 불법 번역 출판물이 대량 유통되는 경우 행정 신고를 통해 유통을 차단한다.

(2) 실무상 주의점

- 개인 학습·연구 목적의 소량 번역은 합법 사용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나, 번역본을 제3자에게 배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합법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다.
- 웹소설 플랫폼의 팬 번역 연재의 경우, 비영리 목적이라도 번역권 침해가 성립하며, 플랫폼 운영자는 통지 후 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책임을 진다.

4) 발행권 침해 (해적판 종이책 판매 / 무단 복제 교재의 유무상 제공 등)

(1) 실무 해결방안

- 해적판 종이책이 오프라인 서점이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경우 공증 구매로 증거를 고정한 후 민사 소송 또는 행정 신고를 진행한다.
- 대규모 해적판 유통 조직의 경우 행정 단속 또는 형사 고발을 통해 근절한다.

(2) 실무상 주의점

-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제작된 정식 도서는 최초 판매 후 발행권이 소진(권리 일회 소진 원칙)되므로, 정식 출판된 중고 도서의 재판매는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판매자가 해적판임을 알지 못하고 합법적인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은 면제되나, 판매 중단과 침해품 폐기 의무는 남는다.
- 학원·교육기관이 무단 복제 교재를 수강생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복제권과 발행권 침해가 동시에 성립된다.

5) 개작권 및 관련 2차적 저작물 권리 침해 (무단 웹툰·시나리오·희곡 각색 /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제작 / 2차 창작·팬픽·패러디의 상업적 이용 등)

(1) 실무 해결방안

- 무단으로 2차적 저작물을 제작·유통하는 경우 개작자와 출판자·제작자·판매자를 공동 피고로 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2차적 저작물의 유통 중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2) 실무상 주의점

- 사상·표현 이론론에 따라 단순한 이론·아이디어·프레임워크 자체는 보호 대상이 아니며, 원작의 구체적 표현·캐릭터 설정·플롯 구조·고유 문체 등을 실질적으로 차용한 경우에만 침해가 성립된다.
- 2차적 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적 기여가 있더라도 원저작자의 허가 없이는 침해가 성립된다.

6) 저작인격권 침해 (표절 / 무단 이름 삭제·허위 표기 / 내용 왜곡·변조 등)

(1) 실무 해결방안

- 저작인격권 침해의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침해 중지, 영향 제거, 공개 사과(정정문 게재),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저작인격권 침해는 행정처벌이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으므로 민사 소송이 주된 구제 수단이다.

(2) 실무상 주의점

-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사망 후에도 영구히 보호되며, 저작자의 상속인이나 국가가 침해에 대항할 수 있다.

7)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침해 (전자책 DRM 해제 / 워터마크 제거 / 유료 콘텐츠 결제 벽 우회 / 크랙 툴 제작·배포 등)

(1) 실무 해결방안

-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여 불법 복제·전파를 하는 경우 복제권·정보네트워크전파권 침해와 함께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침해를 별도로 주장할 수 있다.

- 크랙 툴을 제작·배포하거나 우회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민사 소송과 함께 행정 신고, 중대한 경우 형사 고발을 검토한다.

(2) 실무상 주의점

- 기술적 보호조치의 회피·파괴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되며, 합법 사용 예외(개인 학습·연구, 도서관 보존, 보안 연구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침해 책임이 발생한다.

-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자체는 민사·행정처벌 대상이며, 영리 목적의 우회 행위가 중대한 정황에 해당하는 경우 단독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사법 실무에서 대부분 불법 복제·발행·정보네트워크전파 행위와 결합되어 발생하므로 형사 고발 시에는 해당 행위와의 결합을 함께 입증하는 것이 유리하다.

- DRM을 해제하여 전자책 파일을 복제·배포하는 경우 복제권·정보네트워크전파권 침해와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침해가 경합하므로, 증거 수집 시 DRM 해제 행위와 불법 배포 행위를 모두 고정해야 한다.

3. 단계별 법적대응절차 및 실무 적용 포인트

어문저작물 침해 발생 시 협상·조정이 실패하거나 침해 규모가 큰 경우, 행정 신고·민사 소송·형사 고발의 3가지 법적 대응 절차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각 절차의 특징과 실무상 주의점은 다음과 같다.

1) 행정 신고 (신속한 침해 제압 방안)

행정 신고는 민사소송이나 형사고발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고 비용 부담이 적어, 신속한 침해 중단이 필요한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수단이다. 특히 불법 인쇄 공장 단속, 대규모 해적판 유통 차단, 온라인 불법 전자책 사이트 차단 등에 효과적이다.

(1) 신청 준비 및 제출

저작권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국가판권국 또는 침해 행위 발생지, 침해 결과 발생지, 침해물 보관지, 침해물 압류지, 침해자 소재지의 지방 저작권 관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① 조사신청서(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인적사항, 신고일자, 사실관계 및 침해 사유), ② 신고인의 신분 증명, ③ 저작권 권리증명(도서 원고, 저작권 등록증, 권리취득계약서 등), ④ 침해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불법 복제품 실물, 침해 웹사이트 주소, 판매 링크, 구매 영수증, 공증문서, 사진 등).

신청은 온라인(국가판권국 온라인 신고 시스템)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실무적으로 증거의 완결성이 높을수록 수리 가능성이 높다.

(2) 신청 검토 및 조사 개시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서류 접수 후 1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한다. 수리가 결정되면 담당자가 즉시 조사에 착수하며, 필요시 피신고인 및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침해 현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수리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 전문가와 사전 검토를 권장한다.

(3) 처분 사전고지 및 피신고인 항변

조사 결과 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기관은 피신고인에게 《행정처벌 사전고지서》를 발부하여 처분 관련 사실과 근거, 진술권 및 항변권 등을 고지한다. 피신고인은 《행정처벌 사전고지서》 수령 후 7일(공시송달의 경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서면으로 항변할 수 있다.

(4) 처분 결정 및 이행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조사 내용과 피신고인의 항변을 종합하여 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행정처분 결정을 내린다. 행정처분 내용으로는 침해 행위 중단 명령과 함께 다음과 같은 제재를 병과할 수 있다: ① 경고, ② 불법소득 몰수, ③ 침해 물품 압수·폐기, ④ 침해 물품 제조에 사용되는 도구 및 장비의 압수·폐기, ⑤ 과태료 부과

(5) 불복 시 구제절차

피신고인이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 60일 이내에 국가판권국, 동급 인민정부 또는 상위 저작권 관리기관에 행정 재심을 청구하거나, 6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실무 적용 포인트

- 행정 처리 결과는 추후 민사 소송에서 침해 사실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민사 소송 전에 행정 신고를 통해 침해 사실을 확정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다.
- 행정 신고는 '공공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나, 어문저작물 침해의 경우 대부분 불법 복제·유통 행위가 공공 이익(저작권 질서, 시장 질서)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공공이익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라도 신고를 할 수 있다.
- 대규모 불법 인쇄 공장이나 조직적인 해적판 유통의 경우, 저작권 관리기관 단독보다 공안·시장감독관리국과의 합동 단속을 요청하면 단속 성공률과 처벌 강도를 높일 수 있다.

2) 민사소송 (권리 보호의 최종적 법적 수단)

민사소송은 협상, 조정이 실패하거나 손해 규모가 큰 경우 선택하는 권리 구제 수단으로, 법적 강제력을 가지며 손해배상·침해 중지·사과 등의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다. 절차가 복잡하므로 전문 지식재산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1) 소송 준비 및 제기

저작권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① 침해자의 특정(개인·법인의 신원, 주소, 연락처 확보), ② 침해 사실 및 손해액에 대한 증거 정리, ③ 소장 작성을 진행한다. 소장에는 청구 취지(침해 행위 중지, 손해배상, 소송비용 부담, 공개 사과 등), 사실관계, 법적 근거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준비가 완료되면, 법원에 소를 제기한다. 실무적으로 관할 법원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침해 행위 발생지 법원이 증거 수집 및 절차 진행에 유리한 경우가 많다. 소송 제기 전에 소송 전 재산 보존(피고 재산 압류·동결)을 신청하여 피해 확대를 방지하고 손해배상 확보를 도모할 수 있다.

(2) 소송 절차 진행

법원은 소장 접수 후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결정하며, 수리 시 5일 이내에 소장 사본을 피고에게 송달한다. 피고는 소장 사본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증거 교환, 사실 조사, 변론기일이 진행되며, 필요시 법원은 감정 기관에 의뢰하여 내용 중복도·실질적 유사성 등에 대한 감정을 진행한다.

(3) 변론 및 판결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증거를 제출하고 변론을 진행한다. 법원은 증거의 진정성, 관련성, 적법성을 엄격히 심사한 후 판결을 선고한다. 일반적인 1심 소송 기간은 3~6개월이나, 다수의 침해자나 복잡한 기술적·문학적 쟁점이 있는 경우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

법원은 침해 사실을 확인한 뒤에 침해 행위 중단, 영향 제거, 사과, 손해배상 등을 판결한다. 손해 배상액은 ① 저작권자가 입은 실제 손해, ② 침해자가 얻은 불법 이익, ③ 정상 라이선스료의 합리적 배수로 계산하며, 위 세 가지 기준으로 계산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인민폐

500위안 이상 500만위안 이하의 법정 배상을 판정할 수 있다. 또한 고의로 침해하고 정황이 심각한 경우 1~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판정할 수 있다.

(4) 항소 및 강제 집행

양측은 판결문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상급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가 없을 경우 판결이 확정되며, 피고가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고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 실무 적용 포인트

- 어문저작물 침해 소송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① 권리 귀속 입증, ② 침해 사실 입증, ③ 손해액 산정의 3가지이므로, 소송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 표절·개작 침해의 경우, 법원은 단순한 아이디어·설정의 유사성이 아닌 구체적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을 엄격히 심사하므로, 원작과 침해물의 구체적인 표절 부분을 지정한 비교 분석 보고서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해적판 종이책 침해의 경우, 공증 구매를 통해 침해품 실물과 구매 과정을 증거로 고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판매자와 제조자를 공동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배상 책임을 분산시킬 수 있다.

- 온라인 전자책 침해의 경우, 플랫폼 운영자를 공동 피고로 포함시키면 통지 후 삭제 의무 위반 여부를 다룰 수 있으며, 플랫폼의 책임을 인정받으면 배상 집행이 용이해지는 경우가 많다.

3) 형사 고발 (심각한 침해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형사 고발은 침해 행위가 중국 형법상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침해자에게 실형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는 수단이다. 어문저작물 침해의 경우 대규모 불법 복제·유통, 상습적인 침해, 조직적인 해적판 제작·판매 등에 적용된다.

(1) 적용 죄명

어문저작물 관련 형사 죄명은 두 가지가 있다:

• 저작권침해죄: 영리의 목적으로 ①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어문저작물·음악·미술·시청 작품·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법률·행정법규가 정한 기타 작품을 복제·발행하거나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공중에게 전파하는 행위, ② 타인이 독점 출판권을 가지는 도서를 무단으로 출판하는 행위, ③ 녹음·녹화 제작자의 허가 없이 그가 제작한 녹음·녹화물을 복제·발행하거나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공중에게 전파하는 행위, ④ 공연자의 허가 없이 그 공연이 녹음된 녹음·녹화 제품을 복제·발행하거나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공중에게 그 공연을 전파하는 행위, ⑤ 타인의 명의를 위조한 미술 작품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⑥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 관련자의 허가 없이 권리자가 작품, 녹음·녹화 제품 등에 대해 취한 저작권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고의로 회피·파괴하는 행위 중 하나를 실시하여, 위법소득액이 비교적 크거나 기타 중대한 정황이 있는 경우 성립되며, 최고 10년 이하 징역과 벌금이 부과된다.

- 침해 복제물 판매죄: 영리의 목적으로 저작권침해죄에 해당하는 침해 복제물임을 명확히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는 행위를 실시하여, 위법소득액이 거대하거나 기타 중대한 정황이 있는 경우 성립되며, 최고 5년 이하 징역과 벌금이 부과된다.

(2) 입건기준

- 저작권침해죄: ① 위법소득액 3만 위안 이상, ② 불법 영업액 5만 위안 이상, ③ 2년 이내에 저작권 침해로 형사·행정처분을 받은 후 다시 침해하여 위법소득 2만 위안 이상 또는 불법 영업액 3만 위안 이상, ④ 불법 복제물 수량 500부(장) 이상, ⑤ 정보네트워크 전파 시 다운로드 수 1만 회 이상 또는 클릭 수 10만 회 이상 또는 회원제 운영 시 등록 회원 1천 명 이상, ⑥ 상기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으나 2개 이상 기준의 절반 이상에 도달하는 경우, ⑦ 타인이 저작권 침해 범죄를 저지른 것을 알면서도 타인이 기술적 조치를 회피·파괴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장치 또는 부품을 제공하거나 기술적 보호조치 회피·파괴를 위한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

- 침해 복제물 판매죄: ① 위법소득액 5만 위안 이상, ② 판매액 10만 위안 이상, ③ 2년 이내에 관련 저작권 침해 및 침해 복제물 판매행위로 형사·행정처분을 받은 후 다시 판매하여 위법소득 3만 위안 이상 또는 판매액 5만 위안 이상, ④ 판매 목적의 침해 복제물 1,000부 이상, ⑤ 아직 판매되지 않은 침해 복제물의 물품 가액 또는 수량이 상기 ②~④에서 정한 기준의 3배 이상에 도달하거나, 이미 판매된 침해 복제물의 판매액 또는 수량이 상기 ②~④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아직 판매되지 아니한 침해 복제물의 물품 가액 또는 수량의 합계가 상기 ②~④에서 정한 기준의 3배 이상에 도달하는 경우 등

(3) 고발 준비 및 제출

저작권자는 침해 행위가 형법에 위반되는 증거를 충분히 준비하고, 고발장과 함께 범죄행위 발생지(침해물 제조·보관·운송·판매지, 침해물 전파 웹사이트 서버 소재지, 네트워크 접속지, 웹사이트 설립자·관리자 소재지, 침해물 업로드자 소재지, 권리자 실제 침해 발생지) 또는 침해자 거주지公安기관에 제출한다. 실무적으로 고발 전에 변호사와 함께 침해 입증의 확실성과 형사 절차의 실익을 검토해야 하며, 무리한 고발은 민사 합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4) 수사 및 검찰 송치

公安기관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후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 입건 후 수사과정에서 침해자의 사무실, 서버, 인쇄 공장, 창고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조사한다. 수사 기간은 통상 2~6개월이며, 복잡한 사건은 연장될 수 있다.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청에 송치한다.

(5) 기소 및 형사 재판

검찰청은 수사 결과를 검토하여 범죄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할 경우 법원에 기소한다. 기소 후 법원은 형사재판을 진행하여 유죄 여부와 양형을 결정하며, 통상 6~12개월이 소요된다.

(6) 형사 절차와 민사 소송의 병행

형사 절차는 민사소송과 병행할 수 있으며, 형사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는 민사소송의 손해배상 청구에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저작권자는 침해자에게 민사적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형사 부대 민사 소송)할 수도 있다.

• 실무 적용 포인트

- 형사 고발은 침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향후 침해 행위를 억제하는 강력한 효과가 있으며, 침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으면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더 쉽게 승인되는 이점이 있다.
- 어문저작물 침해의 경우, 단순한 개인적 불법 공유보다는 상습적·조직적인 해적판 제작·판매, 대규모 불법 전자책 유료 사이트 운영, 상업적 표절 출판 등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입건 기준에 도달하는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 형사 절차에서 확보된 압수 물품, 수사 기록, 감정 결과 등은 민사소송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로 활용되므로,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경우 형사 수사자료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V. 결론

중국 출판시장은 디지털 전환과 생성형 AI 확산에 따라 산업 생태계와 저작권 보호 체계가 동시에 재편되고 있으며, 한국 기업은 '사후적 권리 방어'를 넘어선 '전략적 권리 운영'이 요구된다.

첫째, 권리 분할·현지 내재화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의 독자적 출판 규제 체계 하에서 일괄적 권리 이전은 권리 경계 모호로 분쟁 위험이 크다. 번역권·출판권·정보네트워크전파권·개작권을 사업 목적에 맞춰 분할 라이선스하고, 중국 내에서 저작권 사전 등록을 완료하며, 현지 출판사·플랫폼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법제에 부합하는 콘텐츠 현지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기술 보호에서 '계약·플랫폼·기술' 융합 보호로 전환해야 한다. 전자책 불법 공유·AI 학습데이터 무단 이용·기술적 보호조치 회피 등 신규 침해에 DRM 단독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계약상 권리 범위·준거법·분쟁 관할권을 명확히 하고, 플랫폼 사전 심사와 통지·삭제 의무를 계약에 명시하며, AI 학습 이용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복합적 보호 모델이 실효적이다.

셋째, 출판 전 전체 과정 저작권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다. 침해 상당수가 번역·편집·유통·파생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다. 계약 시 2차적 저작물 권리 귀속을 명확히 하고, 출판 단계에서 계약 부수·유통 채널을 엄격 관리하며, 영상화·웹툰화 등 파생 콘텐츠 개발 시 개작권·촬영권의 권리 범위를 사전에 구분하는 전 주기 리스크 관리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넷째, 다층적 규제 채널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중국은 행정·사법·형사 3층 규제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절차별 요건과 실효성이 상이하다. 소규모 플랫폼 침해는 통지·삭제 제도를 우선 활용하고, 대규모 조직적 불법 유통은 국가판권국 '검망' 특별단속 등 행정 신고로 신속히 침해를 중단시키며, 위법소득이 큰 경우 형사 고발을 병행하는 단계별 대응 전략을 사전에 구축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사무소 등 공식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결론적으로 중국 시장에서의 성공은 콘텐츠 질적 우위가 아닌 현지 법제와 생태계에 최적화된 '저작권 운영 전략'의 차이로 갈린다. 한국 기업은 '사후적 침해 대응'에서 벗어나 현지 전문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사전적 권리 설계'와 '전략적 현지 내재화'를 통해 시장 기회를 선점해야 한다.